

UR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공청회



—홍보부—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는 지난 5월 6일 축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UR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300여명의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들이 참석했으며, 영남대 조석진 교수가 좌장을, 농림수산부 원광식 축산국장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낙농육우협회 김남용 전무,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주)하림 김홍국 사장이 축종별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후 참석자들은 축종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발표내용중 양돈관련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안)

원 광 식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농림수산부는 냉동돼지고기의 수입이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97년 7월부터 관세 33.4%를 부과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간다면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국내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 갈비를 중심으로 수입이 예상되며, 현행관세(25%)를 인상하여 수입할 수 있으나 2004년까지 매년 일정비율(1.2%)의 관세를 감축시켜야 되므로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4년 냉장돼지고기의 개방에 이어 '95년부터 냉동돼지고기까지 쿼타제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의 불안심리요인 등으로 양돈산업의 위축 및 영세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생산비 절감 대책방안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 관리기계나 기구, 분뇨처리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농가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모돈 50두(비육돈 포함 5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우선지원하며,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비용 절감과 절차간소화 도모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업농가중 경쟁력이 있는 모범농가를 선발하여 모델농가로 지정하고 전업농을 지향하는 양

축농가 및 영농후계자의 연수 및 견학장소로 이용하며, 선정된 모델농가에 대하여는 보다 선진화된 기술이전과 자동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고, 농발법에 의한 농업사자격 부여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헬퍼(Helper)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돈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 경영주체에 의한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을 통합경영하여 농가는 계약에 의해 일정규격의 돼지를 생산하여 계열주체에 공급하고, 계열주체는 계약생산된 돼지를 책임지고 수집, 가공, 판매함으로써 단계별 이윤의 배제로 생산비절감 극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계열사업자 육성방안으로 계열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도축장 등 시설분야에 종합지원하고, 시설이 확보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의 지원 및 계열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시설자동화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돼지고기 유통개선 대책으로 백화점, 슈퍼체인 등 기존 육류판매장을 확보한 대형유통업체와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선진국 수준의 도축·가공시설 설치로 1일 1~2천두 처리규모의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설치하고 도축·가공시설 설치자금과 냉장육 유통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농가와 계열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계열화에 참여하는 양축농가, 협업체에게 시설개선자

금 등을 지원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돼지고기 수출촉진 대책으로 돼지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15호 이상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종돈, 사료통일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단지구성농가, 자체 또는 연계 종돈장의 사육시설개선 지원과 도축, 가공장 및 사료공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1두당 1만원씩 수출돈 육성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 방안으로 돼지고기 수출잔여육 유통개선 자금을 수출업체 육성자금으로 전환하여 냉장육은 1톤당 1백만원, 냉동육은 1톤당

70만원씩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도축·가공장 시설 개선중 냉장육 생산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전업농가의 경우 '95년까지, 부업농가는 '9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양돈단지 등 밀집사육시설은 공동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수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축산단지 및 나정착촌 등 축산밀집지역, 상수보호구역 하류 수계 및 공원보호구역 등을 중점 설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양돈산업 발전대책

윤 희 진 ((주)다비육종 대표)

우리나라는 사육규모의 영세성, 장래불안 등으로 지난해에 매일 70여 농가가 양돈을 포기하였다. 규모가 적을수록 분뇨처리 투자에 어려움이 많으며, 가족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규모는 1천두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양돈산업은 자금과 세제면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비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융자금에 대한 금리는 8%로 타산업에 비해 높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등 형편이 어렵다.

또한 양돈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과 농고 외에는 없고, 대학에서도 현장감이 없는 교육으로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매년 1천두에 가까운 종돈이 수입되는데, 이때 종돈과 함께 오제스키병,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유행성 설사와 같은 질병도 수입된다. 종돈개량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수정 보급률도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인공수정 보급률이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분뇨처리문제가 향후 양돈업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가장 기본적인 농지환원 방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발효처리 및 유기질 비료의 유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축산정책은 대가축, 부업규모 위주로 지원되었으며, 정책담당 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이 결

여되었다.

유통·가공분야도 낙후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생적인 도축장 시설을 갖춘 곳은 몇군데 안 되고, 도체등급제의 효과도 아직 크지 못하다.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20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모별 분뇨처리 시설 및 규격화된 표준돈사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고, 종돈장에 위생등급제를 포함하여 오제스키병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업규모 5~10농가 단위의 영농조합법인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 공동분뇨처리, 전산화 등이 용이하고, 번식과 비육의 분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세제 및 자금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종돈의 수입은 국내종돈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한 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제조, 사육규모 상한 등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한 후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정부는 냉장육 취급이 가능하도록 도축장 시설 현대화에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일본의 30억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냉장육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축산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정부산하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장)의 기능을 시험, 연구쪽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자체 추세에 맞춰 중앙에서는 정책입안, 집행기능은 시·도에서 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계열화, 양돈단지, 수출단지 등 정부의 역점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계속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강원양돈조합장은 양돈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경우 20억원 규모일 때 현행 보조 5%, 융자 70%, 자부담 25%로 되어 있어 양축농가의 부담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융자 30%, 보조 60%, 자부담 10%로 해서 양돈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또한 육성자금이나 양축자금은 금리 3% 이내에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지육이 서울로 방출될 때 검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므로 그 시간동안 물류비용 등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돈육수출시 검역관의 결재절차가 복잡하므로 원활한 돈육수출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폐수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6대 도시권내의 가축사육 규제로 인하여 이지역 농가는 이주 또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6대도시 축산인에게도 축발기금지원 등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여 생산된 비료도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밖에도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축분뇨처리 시설자금의 전액 국고 보조 등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

